

언론계 결단을 기대하며



글. 고영재
한겨레신문 시민편집인

언론은 진실의 기록이다. 그러나 그 위대한 명제를 구현하는 길은 험난하다. 언론사엔 독자나 시청자들의 불만과 항의가 쏟아져 들어온다. <한겨레>도 예외가 아니다.

“기사가 재미없다. 여당을 좀 더 신랄하게 비판하라. 무작정 정부를 비판하는 것 같아 아쉽다. 제보했는데 기사로 다루지 않아 섭섭하다. 광고 지면이 넓다. 맞춤법 원칙에 어긋나게 표기됐다.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

하지만 문제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담긴 기사다. 이는 ‘언론중재’의 대상이 된다. 언론중재는 보도 피해자의 당연한 권리다.

디지털 시대 언론에 보도된 기사의 파문은 널리 퍼져간다. 괴물 인터넷의 ‘탐욕’에는 끝이 없다. 인터넷은 시공을 초월해 거의 무한대의 정보를 축적하며, 이를 토해낸다. 진실과 다른 보도의 피해 또한 커질 수밖에 없다. 언론의 사회적 책무를 다시금 곱씹어 볼 때다.

언론이 송두리째 불신당하는 시대다. 시대의 소명을 다하지 못한 언론 스스로 불러들인 불행이다.

‘세월호’는 대한민국의 뿌리 깊은 모순과 부조리, 부패를 상징한다. 이는 곧 한국의 언론이 죽어있었음을 의미한다. 언론을 시대와 사회의 ‘소금’으로 자타가 인정하는 터다.

‘세월호’는 박근혜 정부와 한국 정치, 한국 언론의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울이기도 하다.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를 한 마디로 ‘적폐’의 결과라고 진단했다.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그 무덤덤한 말투가 던지는 ‘무책임’의 느낌이 안타깝다.

세월호 참극 이후 정치권이 보여준 모습도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참극 이후 공동책임자로서 머리를 조아렸던 태도는 간데없다. 온 국민의 충격과 상처를 치유하려는 진심어린 노력은 없다. 부질없는 논란만 무성하다.

‘세월호’ 참극 이후 언론이 보여준 보도 행태도 ‘적폐’ 바로 그것이었다. 언론은 전대미문의 참극을 예고하는 사고 발생을 알리는 첫 보도부터 사실을 정확하게 전하지 못했다. 탑승객, 구조 승객의 숫자조차 오락가락했다. 구조작업 과정에

함께 사는 세상을 꿈꾸는 기업
 세상을 보는 **정직한 눈**이 되겠습니다.



서도 언론은 한가하기만 했다. 구조시능만 하다 그친 해경만큼이나. 3백 명의 생명이 걸린 ‘골든 타임’을 허망하게 놓친 해경의 무능과 실수를 지적한 언론은 없었다. 대형 선단과 대규모 인력을 동원해 구조에 나서고 있다는 당국의 발표를 옮겨 적는 데만 바빴다. ‘한국 사회의 해묵은 부조리가 빚어낸 구조적 참극’이라는 때늦은 진단은 ‘사후약방문’이었다.

반면 ‘유병언 때리기’에는 발 벗고 나섰다. 하늘을 찌르는 민심의 분노를 돌리려는 정부의 꿈수 전략이 통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올 법했다. 사고 해운사의 경영을 사실상 쥐락펴락했다면 그는 도덕적·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러나 그 법적 책임의 한계를 규정하는 문제

는 그렇게 간단치 않다. 결국, 사법부가 그 마지막 선을 결정할 것이다. 그러나 보도는 지레 그에게 무한책임을 요구하는 듯했다. 그의 대규모 인력이 동원된 검거작전 보도는 한편의 ‘첩보드라마’였다. 유병언 보도는 또 다른 유형의 언론 일탈 사례로 비판받을 여지가 있다. 균형감각은 언론의 핵심 덕목 가운데 하나다. ‘사실이라도 진실을 왜곡할 수 있다.’

한국 언론은 굴곡의 역사, 왜곡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분단의 모순과 군부 독재, 그리고 상업주의의 유산이다. 굵직한 오보 사건 사례가 그 생생한 증거들이다.

○○일보는 1986년 11월 ‘김일성 피격설’을 단독 보도했다. 그 이틀 후 그의 사망을 단정하는

보도를 내보냈다. ○○일보는 스스로 ‘세계적 특종’이라며 환호했다. 그러나 다음날 김일성의 생존 사실이 확인됐다. 세계적 특종은 ‘세계적 망신’으로 마무리됐다. 이 오보는 당시 주일 특파원이 일본 정보원에게서 들은 부정확한 정보를 확인과정을 거치지 않고 활자화한 데서 비롯됐다.

○○일보의 오보는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국내 언론은 모조리 ○○일보의 안보 상업주의에 무릎을 꿇었다. ○○일보의 오보를 그대로 옮겨 보도한 것이다. 분단의 상처, 냉전의 상흔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오보 사건이다.

권력이 언론을 손아귀에 쥐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1986년 10월 31일 한국 언론이 그 해답의 하나를 보여줬다. 이날 한국의 모든 매체는 ‘북한의 물 폭탄 위험성’이라는 충격적인 뉴스를 전했다. ‘북한이 금강산댐을 건설해 폭파시킬 경우, 서울 여의도 63빌딩까지 물에 잠길 수 있다.’ 언론들은 가상 시나리오에 정교한 도표와 그림을 곁들이는 친절을 베풀었다.

이 오보는 거액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아무 쓸모 없는 평화의 댐 건설의 계기가 됐다. 당시 국민 성금만 744억 원이 걸렸다. 군부독재 정권과 그 충실한 협력자 언론이 합세해 전 국민을 바보로 만든 셈이다.

〈○○○신문〉도 의미심장한 오보 사례를 남겼다. 93년 10월 서해 페리호 침몰사건 때다. 서해페리호 사건도 3백 명 가까운 희생자를 남긴

참사였다. 〈○○○신문〉은 ‘백 선장(페리호 선장)이 살아 있다’는 특종을 보도했다. 자취를 감추었다는 선장은 며칠 후 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고인의 명예와 선장 유가족들 마음의 상처는 회복할 길이 없었다. 현지 주민의 말에 대한 확인과정을 거치지 않은 게 화근이었다.

이 오보는 무모한 속보경쟁의 폐해를 여실히 보여준다. 속보경쟁은 부정확한 정보를 양산할 수밖에 없다. 정보 홍수 시대에 정통 언론의 존재의의이자, 디지털 문명의 거센 파도를 이겨낼 길은 정보의 정확성이다. 무의미한 속보경쟁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보도과정에서 빚어진 오류도 그 결과다.

세상은 변했다. 적어도 형식적 민주주의는 확보된 상황이다. 군부의 철권통치 시절의 노골적인 언론탄압도 없다. 그럼에도 언론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은 어느 때보다 높다. 다양한 얼굴의 ‘불량 상품’을 시장에 내놓는 탓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저널리즘의 원칙은 존중받지 못하고 있다. 진실과 정의를 추구한다는 언론사들의 사시는 내팽개쳐지고 있다. 언론의 본분, 나라의 장래 따위에 대한 고뇌는 없다. 인간에 대한 따뜻한 시선도 사라졌다.

언론은 시대의 거울이다. 언론에는 한 사회의 시대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한 사회의 ‘의미 있는’ 모든 것들이 거기에 담긴다. 그 기록은 기록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 그 기록은 독자, 또는 시청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한다. 언론 소비

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뇌된다. 언론 정신은 시대의 정신을 결정하는 데 주요 변수로 작용하게 마련이다. 병든 언론은 병든 사회를 만들 수 있다.

한국 언론의 결단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언론에 부여된 사회적 책무에 대한 철학, '하자' 없는 물건을 시장에 내놓겠다는 장인 정신, 인격의 존엄성에 대한 신념을 가다듬고 독자들과 화해를 시도할 때다. '진보 언론', '보수 언론' 허

울 좋은 간판은 서둘러 폐기하는 게 마땅하다. 자칫 언론이 언론소비자들의 집단저항에 부딪힐 위험성도 있다. 언론 산업 자체가 '리콜 상품'이 돼 폐기당할 운명에 놓인 지도 모른다.

젊은이들이 대거 전통 언론 매체에 등 돌리는 현상을 눈여겨 볼때다. 디지털 문명 탓으로만 치부할 일이 아니다. 언론이 활력을 잃을 때 사회적 활력을 기대할 수 없다. 언론의 죽음은 시대의 몰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